코로나19 극복에 道 "500억 재난기금 푼다"

정부의 재난관리기금 용도 한시적 확대 조치 따라 도,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생활지원금 지원 검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 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관련 기금이 활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00억원대 재난 관련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지난 21일 정부가 코 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포함)으 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 적으로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 무예치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함에 따른 조치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 령'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해 구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현재 제주도의 재난 관련 재원 금 액은 재난관리기금 235억7800만원, 재해구호기금 299억9500만원 등 총 535억73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방역용품 구 입과 물자 지원, 자가격리자 구호물 품 지급 등을 위해 41억원을 집행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고용노동부가 신설한 2000억원의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최대 한 활용하기 위한 협의에도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와 특수형태근로자,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직업훈 련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2000억원 중 대구·경북지역에 700억원이 투입 되고, 나머지 1300억원은 17개 광역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

급휴직이나 특수형태근로자 등 사각 지대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이 필 요하다"면서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 비 확보와 함께 자체재원을 투입해 고용안정대책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재난 관련 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무급휴직 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은 취 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을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대 상과 지원방식 등을 결정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추경 가시화… "진정한 대응책 돼야" <코로나19 대응>

원 지사 "3월말 거쳐 구체화" 김 의장 "위기 악용 안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대응 관 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시화되 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진정 한 코로나 대응 재정정책'이 돼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4일 코로나 19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정부 의 추가경정예산과 그 사업에만 한 정하지 않고 제주는 제주의 산업구 조와 고용구조의 특성에 맞는 제주 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 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3월말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대로 제주도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확정짓고 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380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가 용재원 모두를 코로나19로 인해 발 생하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 전하기 위해 편성해야 한다"며 "위기 를 악용해 잘못된 재정정책을 교정 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특히 김 의장은 "국비 매칭, 지방 교부세 패널티 반환금 등 기존 재정 상황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 작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제 한적으로 편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면서 "이것은 진정한 코로 나19 대응 재정정책이 아니지 않는 가. 차떼고 포떼고 도민을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세수의 1012H D-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브리핑

"드림타워 개장 연기해야"

제주시갑 고병수 예비후보

<정당·성명·가나다 순>

"저소득층 재난수당 반영을"

제주시갑 임효준 예비후보

소득층 대상으로 '재난수당' 제안

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원희룡

임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까지도 50조를 투여할 정도로 심각

한 국가위기 상태"라면서 이같이

오은지기자

제주도지사에게 거듭 촉구했다.

무소속 임효준 예

비후보는 24일 "제

주도의회 정책연구

실에서 제시한 제

주도민 중 월소득

220만원 이하인 저

"수입보장보험 농산물 확대"

제주시갑 송재호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송재 호 예비후보는 24 일 보도자료를 내

고 "수입보장보험 대상을 제주 농산 물 전 품목으로 확 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예비후보는 "제주도의 경우 콩과 마늘만 수입보장보험 대상에 해당되고 월동채소 등은 수입보장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주농 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은지기자

불법선거감시단 출범

제주시을 오영훈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오영 훈 예비후보는 지 난 23일 '제주시을 불법선거감시단'을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터 주권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송은범기자

정의당 고병수 예 비후보는 24일 기 자회견을 열고 "제 주 난개발의 상징

인 '드림타워' 개장 을 연기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대책 없이 추진 되는 드림타워는 제주도민에게 악 몽이 될 것"이라며 오폐수 처리, 교통체증 완화, 중소상공인들에 대 한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

오은지기자

직선제 등 10대 공약 발표

제주시을 부상일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는 24일 10대 공약을 발표

함을 강조했다.

공약은 ▷국회의 원 소환제 ▷읍·면·

감시단 공동단장에는 고정효·배 동장 직선제 ▷제주형 마인드 케어 명관 제주시을 당원협의회장이 위 센터 추진 ▷교육특화도시 육성 ▷ 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 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촉됐고, 감시단원은 총 30명으로 구 화북·삼양 신도시 벨트 조성 ▷펫 리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 성됐다. 오 예비후보는 "부정선거로 산업 메카 조성 ▷1차 산업 보호 ▷ 보육환경 대폭 개선 및 디지털 성범 죄 전담조직 신설 ▷국제적 수준의 방역체계 제도화 등이다. 송은범기자 와 제주도에 요구했다. 송은범기자

"총선 불출마… 장성철 지지"

제주시갑 김용철 예비후보

무소속 김용철 예 비후보는 24일 기 자회견을 갖고 오 는 제21대 국회의 원 선거 불출마와 함께 미래통합당

입당과 장성철 예비후보 지지를 선

그는 "미래통합당 당원으로서 후보들이 압승을 거둬 문재인 정권 의 위선과 폭주를 막아내고 정권교 체를 이룰 수 있도록 백의종군하겠 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코로나 추가 대책 과감히

제주시을 강은주 예비후보

민중당 강은주 예 비후보는 24일 "정 부와 제주도는 코 로나19 추가 대책 을 과감하게 하라"

▷유급휴직 보장·해고 금지 ▷가족 돌봄 유급휴가 확대 보장 등을 정부

"위성곤, 통합당 탓 근거를" 서귀포시 강경필 예비후보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위 성곤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의 반대

로 제주4·3특별법 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근거

그는 "지난 8일 민주당 도당 선거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위 예비후 보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못한 이유를 통합당 탓으로 떠넘겼 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태윤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동의안 등 총 77개의 안 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본격

임시회 폐회 77건 안건 처리 양영식 "신세계면세점 진출 지역환원 대책 우선돼야"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를 매각하 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최종 의 결되면서 매각절차가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제 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 및 미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과 행자 과태료 부과규정 등이 담긴 제 동의(계획)안, 의견 제시, 청원 등 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총 77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따라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로 사실상 애물단지였던 평택항 제주종 연동갑)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신세계 합물류센터는 결국 매각된다.

거점 물류센터 용도로 48억3000만원 (국비보조 50%)을 투입해 건립됐지 만 제주-평택항로를 오가던 카페리 운항이 중단되고 위탁업체가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형청소년문화의집 신 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 녀로 완화하는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조례안도 최종 통과됐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그룹의 제주 면세점 진출에 앞서 도민 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제주농수 사회 의견 반영과 지역환원 대책이 우 축산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수도권 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은지기자

제주4・3을 정치적 표로 환치기하지 말라!

이번 총선에서 제주시 갑 지역에 출마한 송재호 민주당 후보의 부친이 4·3사건 당시 대동청년단 표선면책이었음이 문제가 된다는 일부의 시각이 있다. 이는 또 하나의 잔인한 인권침해적 신종 연좌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폭도의 자녀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자유민주 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송재호 부친 같은 대동청년단을 포함한 많은 애국인사들이 경찰. 군과 협력하여 4·3 폭동과 반란을 평정할 수 있었기에 해방이후 좌익이 장악한 혼란기와 6.25 남침 전쟁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을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제주4·3사건의 주범 즉 가해자는 바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은 중앙당의 지령에 따라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같은 해 10월 24일 제2대 폭도 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정부군과 반란군 간에 전투가 벌어진 사건이 4·3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러한 4·3사건의 팩트를 애써 외면하고 4·3사건을 4·3봉기 4·3항쟁 등으로 둔갑시켜 도민을 기만하고 오히려 4·3사건을 정치적 노획물처럼 악용하면서 도민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가르고 분열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음 사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4·3사건의 주모자이자 초대 폭도사령관인 김달삼은 왜 북한에서 훈장을 받았는가?
- 4·3사건이라는 용어는 법률로 정한 4·3에 대한 정명인데 왜 또 정명 타령인가?
- 4·3특별법(약칭) 개정 실패는 정부 반대 때문인데 민주당은 지난 20년 동안 야당 때문이라며 4·3희생자 유족과 도민을 속인 것이 아닌가?

우리는 4·3사건의 진실에 녹아있는 건국의 가치를 무시한 채 제주도민의 희생과 한을 자기들의 정치적 표로 환치기 하려는 정부, 제주도의 정치인과 정당인 그리고 공직선거 후보자들을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4·3사건의 진실 즉 아직도 살아있는 제주의 역사를 수호하려는 양심과 용기를 지닌 후보자들을 이번 총선에서도 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 3. 25.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상임대표 신구범(전 제주도지사).

고 문 강재문 (제주4·3경찰유족회 회장). 고승종. 권요한(목사) 권홍태(전 제주도 부의장) 김순택 (아르고스 총회장). 김영중(전 제주경찰서장). 김태혁(전 제주도 교육감). 류승남 (목사). 한철용(예비역육군소장) 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공동대표 김동일 (자유논객연합 회장). 김인순 (전 정우흄관 대표). 문대탄 (전 제주일보 상임논설위원). 박찬식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양치복(전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회장). 이동해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대표). 홍석표 (전 제주신업정보대학 교수).

이 사 강성훈 (전 육군 중령). 강원현 ((사)3·1정신보국운동연합 제주회장). 강응봉 (안보 단체장). 고영석 (호우회원). 김성석 (4·3유족). 김승필 (전 주민자치위원장). 김웅철(벽사문예포럼 이사장). 김정문 (공학박사). 김중식(전 해군 중령) 김효(관광학 박사) 송정철 (목사). 신백훈 (하모니십연구소 대표). 안성화 (전 법학 교수). 양완갑 (전 육군 준위). 양원오 (4·3유족). 오을탁 (제주 4·3정립연구유족회 사무국장). 이광후(연극인) 이승학 (전 중등교감). 이영도 (안보단체 사무국장). 임진출 (안보단체 사무국장). 장승홍 (전 언론인). 장홍삼(4.3유족). 조데보라(전도사). 현윤식(자영업)